

민주 당권주자들 “예비경선 탈락후보 잡아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들간에 예비경선 낙선자·최고위원 후보자를 향한 구애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송영길·김진표·이해찬 의원 등 3명의 후보(기호순)는 1일 전당대회 초반 선거전의 세를이려 위해 예비경선 탈락후보 등을 끌어안는데 힘을 쏟고 있다.

이해찬 의원은 지지한다는 뜻을 일찌감치 밝힌 이종걸 의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탈락후보들은 어느 후보를 지지할지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당권주자들은 예비경선이 끝나고 본선에 오르지 못한 최재성·이인영·박범계·김두관 의원을 직·간접적으로 접촉하며 우군 만들기에 주력했다.

특히 예비경선에서 고배를 마신 최재성 의원에 ‘러브콜’을 집중하고 있

최고위원 ‘짜짓기’ 관심...수도권 권리당원 표심 변수 송영길·김진표·이해찬, 오늘 첫 TV토론서 격돌 예고

송 의원은 지난달 30일 최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송파을 대의원대회에 참석한 뒤 페이스북을 통해 “당대표가 돼 최 의원과 함께 당 혁신을 꼭 이뤄야겠다고 다짐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자신의 매니페스토 개혁안에 최 의원의 정당개혁안을 담았다는 점을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

이 의원은 예비경선이 끝나고 최 의원을 포함해 낙선한 후보들과 일일이 통화하며 당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는

말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대표 후보들의 구애경쟁이 갈수록 뜨거워지지만, 예비경선 탈락후보들은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최 의원은 “혁신안을 위해서 후보를 지지하느냐, 중립을 지키느냐를 놓고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당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연) 소속인 이인영 의원도 “진보노선으로 후보들의 혁신노력을 좀더 촉진하고 검증한 뒤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범계 의원 역시 “민심탐방을 더 해 보고 조만간 후보 지지여부를 결정할



송영길

김진표

이해찬

것”이라고 했고, 김두관 의원 측은 입장문에서 “김 의원이 모든 것을 백지에서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권주자들과 최고위원 도전자들과의 ‘짜짓기’도 관심사다.

최고위원 가운데 공식적으로 당대표 후보 지지선언을 한 후보는 없으나, 설흔 의원이 공공연히 ‘이해찬 대세론’

을 거론하고, 박정 의원은 송 의원이 가는 행사에 동행하는 모습이 자주 포착되면서 주목받고 있다.

김 의원의 경우 본인의 과거 지역구(경기 수원시 정)를 물려받은 박광은 의원 등의 지지를 내심 기대하고 있다.

당대표 후보들의 구애경쟁 결과는 본선 승패에 큰 영향을 주는 권리당원 표심 향배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7월 초 현재 73만명인 권리당원 가운

데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율이 44%(서울 20%·경기 20%·인천 4%), 호남은 26%로, 이들 지역의 표심이 승부를 가를 전망이다.

이밖에 충청 17%, 영남 12% 등으로 나타났는데, 전통적인 불모지로 여겨지는 영남지역의 권리당원 숫자가 많이 늘어 본선 승패를 가를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다.

당권주자들과 최고위원 도전자들은 이날 일제히 공명선거 실천 서약식에 참석하며 표심잡기에 주력했다.

한편, 3명의 후보는 2일 오후 2시 광주MBC 주최로 열리는 당대표 후보토론회에 참석, TV토론을 통한 격돌을 예고하고 있다.

/연합뉴스

송영길 “친문·비문 통합 내가 책임”

부산서 당대표 선거 출마선언...“당정청 소통 강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1일 부산에서 출정식을 열고 본격적으로 지지세 확보에 들어갔다.

송 의원은 이날 오후 부산일보 대강당에서 당대표 선거 출마선언에 이어 출정식을 열었다.

그는 “당대표가 되면 누구보다 당·정·청 관계를 잘 융합시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도록 하겠다”며 “친문과 비문, 지역, 운동권을 넘어 하나로 통합시킬 수 있는 사람은 저 송영길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정·청간의 신뢰와 애정을 기초로 긴밀히 소통하고 원팀 민주당을 구축해 21대 총선에서 승리하는 민주당

을 만들겠다”며 “부산에서 송영길의 손을 잡아주면 영·호남 지역의 벽과 분단의 벽을 넘어 한반도 평화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공천 룰은 1년 전에 확정하는 등 예측 가능한 당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고 모든 공직·당직 후보자의 인선과정은 평등하고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시스템을 혁신하겠다”고 약속했다.

송 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러시아 특사와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것을 언급한 뒤, 대통령의 신한반도 평화경제구상과 부산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거듭 강조했다.

/연합뉴스



약수하는 김동철 비대위원장과 서주석 차관

바른미래당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과 서주석 국방부 차관이 1일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주최 관계 부처 현안보고 ‘국방부 주요 현안 점검 및 개선방향 검토’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바른미래, 전대 후보등록·예비경선 일정 변경

비대위, 후보등록 8~9일, 예비경선 11일 결정

바른미래당은 9·2 전당대회 후보등록과 예비경선 일정을 예정보다 9일가량 앞당기기로 했다.

김철근 대변인은 1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후보등록 신청일자를 당초 8월 17~18일에서 8~9일로, 예비경선일을 8월

20일에서 11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당 지도부 선출을 위한 선거운동기간을 보름가량으로 늘려 전국적 전대 흥행몰이에 나서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바른미래당은 또 책임당원과 일반당원 각각 2,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

를 실시한 뒤, 그 결과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예비경선을 하기로 했다.

또한 예비경선에서 여성 최다득표자가 컷오프 기준인 6위 안에 들지 못해도 6위로 인정하기로 결정했다.

후보등록을 위한 기탁금은 5,000만원으로 정했다. 예비경선 등록 시

2,000만원, 예비경선 통과 시 3,000만원을 추가로 내는 방식이며, 반환은 안된다. 다만 청년위원장 출마자 기탁금은 1,000만원이다.

TV토론회는 지상파 방송3사 토론회 1회, 종합편성채널 토론회 2회, 권역별 지역 민방 토론회 5회 등 총 8차례 하기로 했다.

책임당원 자격과 관련해 오는 5월 31일 이전에 입당해 3,000원 이상의 당비를 한 차례 이상 내면 인정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정가브리핑

박지원 “9월 유엔총회서 종전협정, 좋은 그림”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1일 “오는 9월 열리는 유엔총회에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연설을 하고, 남북미 중 4개국간 종전선언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그림”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모 방송에 출연해 이같이 밝히면서 “최근 서훈 국정원장의 방미 및 8월 방북설, 2차 남북정상회담이 가을에서 8월로 당겨진다는 보도, 그리고 폼페이여와 미국이 변화의 움직임이 있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양재준 중국 국무위원의 방한 등 종전선언에 중국이 참여하는 문제에 대해 “정전협정 당사국이 미국·북한·중국이기 때문에 종전협정



에도 중국이 포함돼야 한다”며 “중국이 원하고, 김정은 위원장도 중국의 참여를 원하기 때문에 종전협정에 중국이 참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선 “김 위원장은 ‘국가주의다, 막방개혁’이라고 문재인 대통령과 각을 세우면서 대권

문제를 대해 “정전협정 당사국이 미국·북한·중국이기 때문에 종전협정

김동철 “특검, 김경수 피의자 전환 당연한 조치”

바른미래당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은 1일 “특검팀은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로 모든 범죄사실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며 “늦었지만 당연한 조치”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드루킹 사건을 수사 중인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김경수 경남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한 것과 관련,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특검이 확보한 김 지사와 드루킹의 메시지 내용에 따르면 이들은 문재인 대선후보의 재벌개혁 방안까지 주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핵심 정책에 대한 의견까지 주고받은 정도로 가깝고 긴밀한 관계였음을 방증한다”고 말했다.

드루킹 수사를 지휘했던 이주민 서



울경찰청장의 유임에 대해서도 그는 “수사기관이 정권에 충성하면 보상한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문재인 정부의 신적폐”라며 경질을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범죄사실을 밝혀내기는커녕 김 지사를 두둔하고 비호하기 급급했던 바주키 수사, 부실수사 책임자인 이주민 서울청장도 특검의 명백한 수사 대상”이라며 “남이 하는 것은 약이지만 내가 하면 전부 선이라는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인식이야말로 청산해야 할 적폐”라고 강조했다.

/서울=강병은 기자

북미협상 등 중대 변수 산재...청 “결정된 바 없다” ‘선불리 움직일 경우 역효과 날 수 있다’ 우려 감안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세 번째 정상회담 시기와 관련해 청와대는 1일 “아무것도 결정된 바 없다”며 조심스러운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이미 두 차례 정상회담을 한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4·27 판문점 선언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가을 평양을 방문하기로 했다’는 내용을 담아 ‘올가을 남북정상회담’을 예고했다.

이를 놓고 ‘가을 남북정상회담’ 시점이 ‘8월 말’로 앞당겨질 수 있다는 관측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비핵화를 둘러싼 북미간 협상이 어떻게 진행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데

다 중국의 종전선언 참여 여부 등 중대 변수가 곳곳에서 불거진 만큼 청와대로서는 남북간의 또 한 차례 대형 이벤트 추진에 극도로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8월 말 남북정상회담’ 가능성이 거론된 것은 북미간 비핵화 협상이 소강 국면으로 접어든 상태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우리 정부의 발걸음이 빨라진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싱가포르 국민방문 중 북미간의 ‘약속 이행’을 강조하며 사실상 중재행보 재개를 시사했고, 그로부터 일주일 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미국으로 보냈다.

북미간 비핵화 협상상황을 공유하고, 앞으로의 협상방향에 대해 한미간의 의견을 교환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정의용 실장은 지난달 극비리에 방한한 양재준 중국 외교담당 정치국원을 면담했다. 중국의 종전선언 참여와 관련한 얘기가 오갔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서훈 국정원장 역시 지난달 26~29일 미국을 방문해 행정부 고위인사들을 만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등 남북관계 사안에 대한 제재면제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남북대화에서 핵심역할을 해온 서 원장과 정 실장의 행보가 활발해지면서 일각에서는 이같은 흐름이 자연스럽게 남북정상회담 조기 개최로 이어지지 않겠느냐는 추측으로 이어지고 있다.

남북이 3차 정상회담이라는 빅 이벤

트를 현재의 소강국면을 돌파할 모멘텀으로 삼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하지만 청와대는 여전히 8월 남북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이 일정한 거리를 두는 듯한 모습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정상회담과 관련해 아무것도 결정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북미간 협상이 어떻게 전개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북미간 중재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 못지않게 ‘선불리 움직일 경우 역효과만 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남북간 문제는 진행상황에 따라 속도가 빨라질 수도, 늦어질 수도 있다”며 “양측에서 고도의 정부적 판단이 있을 것”이라며 개최시기를 예측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